

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

2024. 9.

관계기관 합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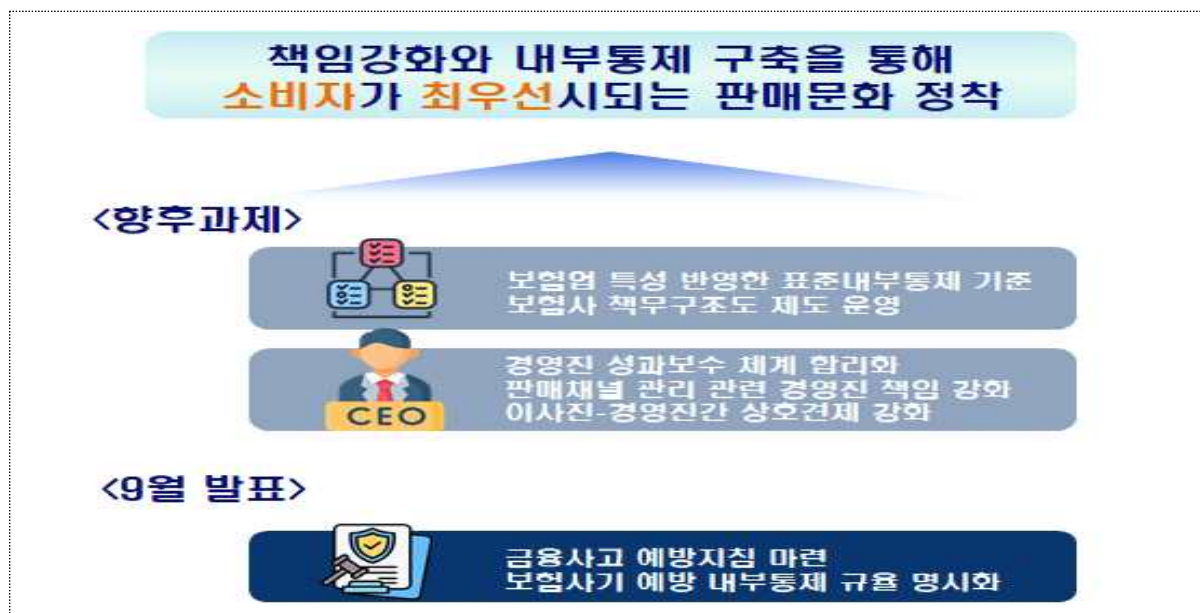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주요내용	2
1.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	2
2.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규율 명시화	4
III. 향후 추진계획	6

I. 추진배경

- 광범위한 내부통제 규제에도, 대규모 금융사고가 매년 반복되며 내부통제 강화방안 지속 추진 중
 -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,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* 제도 도입
 - * 보험회사는 '25.7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의무 적용
- 보험산업은 금융사고* 발생이 타 업권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이지만, 보험설계사, 보험사기 등 업권 특수적인 사고들이 지속 발생
 - * '18년 이후 금융사고 연평균 14.5건, 88.5억원 발생(금감원)
-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운영위험(GA, 플랫폼 등) 확대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가 중요
- 특히, IFRS17 도입으로 단기성과주의식 과당경쟁이 격화되면서 보험사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비판 상존

- ➡ 이에,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추진
 - 가장 기본적인 금융사고 예방지침과 보험사기 관련 법제화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제도개선(→3차 개혁회의 발표과제)



II. 주요내용

1.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

◆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절차를 4개 항목으로 정하고, 예방 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침 제정

【현황 및 문제점】

- 보험업권도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*하고 있지만, 타업권(은행, 여전업)과는 달리 금융사고 예방지침이 부재한 상황

* 추이(억원, 건) : '19. 284(27) → '20. 149(27) → '21. 30(22) → '22. 16(11) → '23. 37(14)

- 금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지침 제정* 추진

*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('23.11월), 내부통제워크숍('23.12월), 보험개혁회의 실무반('24.상)

【개선방안】

① 금융사고 취약직무에 대한 통제 강화

- (순환근무/명령휴가) 고위험업무* 담당직원은 장기간 연속근무를 금지(5년 초과)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명령휴가(연 1회 이상) 실시
* 소비자과 금전거래, 자산운용, 외부 업체와의 계약 등 금융사고 위험 높은 업무
- (직무분리)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·부서가 참여하게 하고, 직무분리 운영 적정성에 대해 정기 점검

② 보험회사 내부통제 역량 제고

- (준법감시 인력) 준법감시 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(임직원의 1% 이상*)
* 즉시 인력충원이 곤란한 점을 감안, 경과규정 마련(0.6%['25] → 0.8%['26] → 1.0%['27])
- (준법감시 전문성 제고) 준법감시인 선임요건(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) 명시 및 준법감시 전문인력* 확충(준법감시 직원의 50% 이상)
* ①자격증 보유자, ②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, ③관련 업무경력 5년 이상

③ 투명한 자금집행을 위한 견제장치 마련

- (PF대출 관리) 지급·상환계좌 사전지정(지정계좌를 통해서만 거래), 자금인출요청서 수신 시 진위여부 확인(차주인감 사전등록 등) 등
- (자금거래 통제)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(지급대상자·수취계좌 명의 상이, 거액 송금 등)에 대해 별도 자금집행 절차 마련
- (업무위탁 기준) 업무위탁 처리기준* 마련 등 수탁사와의 거래 관련 관리체계 구축

* 수탁사 임의선정 방지 등 업무위탁 계약의 방법·절차

④ 이상징후 조기 탐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

- (상시감시)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* 탐지를 위한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, 금융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불시점검 실시

* 보험료 자동이체 여부·연체, 보험금 지급청구 금액·빈도 등 참고하여 판단

- (본인확인 절차) 소비자 제출서류의 위·변조 여부 검증절차* 마련,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 도입

* 비대면 금융거래 관련 본인확인 시스템(ARS인증,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사설인증서, 카드 본인확인서비스, 계좌 인증, 휴대폰 본인인증, 실명인증 등) 도입 등 포함

- (내부고발)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고발자 확대*, 다양한 접수채널 및 포상기준 마련

* 내부고발자 범위에 보험설계사(전속·GA 설계사)를 포함

⇒ (要조치사항) 생·손보험회 자율규제 제정

2.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

◆ 과당경쟁 등이 유발하는 보험사기 및 도덕적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


【현황 및 문제점】

- 최근 보험업계는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 등이 지속되면서 보험사기 및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취약
 - 그간 시행된 「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」(이하 '모범규준') 내용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명시적 규제로 전환 필요

【개선방안】

- 담보별 보장내용 및 한도 등에 대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실시
 - 상품위원회에서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심의
 - 평가결과 보험사기 취약요인 발견시 대응방안 마련 의무화
- 과도한 보장한도 설정 방지
 - 담보별 보장금액 한도 설정시 도덕적 위험 등을 감안하고, 기존 체결된 계약(타사 계약 포함)의 보장금액 한도 합산
 - 보험사기 목적의 계약체결 방지를 위해 중복·과다 보험가입방지 인수심사 절차* 강화
 - * 고위험 청약건(사망보험금 30억원 ↑, 계약건수 4건 ↑) 특별 인수심사 실시 등
-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무리한 사고 조사로 인한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 원칙 규정
 - ※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

-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공시하고, 매분기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병행

 **(要조치사항) 보험업감독규정(제7-72조의1 신설) 및 시행세칙* 개정**

* 제5-19조의2 및 [별표14]표준사업방법서 개정, [별표36]상품위원회 운영기준 신설

□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*에 대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

① 보험회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 서식 마련

- 보험사기 의심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감원 보고 서식*을 시행세칙에 규정화

* 보험 사기유형, 관련자 및 사건정보, 보험사 담당자 정보 등 포함

② 보험사기 조사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 범위 확대

- 보험사기 혐의점 발굴을 위해 미 실시 진료비 등 거짓청구 적발정보*

* 요양기관 현황 및 요양급여 심사·현지조사 자료(심평원)

- 차량 도난신고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자동차 등록원부(국토부)

③ 신속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


-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 할증 보험료 환급, 피해사실 고지 등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마련

① (고지기한) 피해사실을 고지하는 기한(15영업일) 명시

② (고지방법) 연락이 두절된 경우 행안부 주소확인 후 재고지 등

③ (환급시기)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없이 지급

④ (보고의무) 환급실적 등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

 **(要조치사항)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**

Ⅲ. 향후 추진계획

【 개혁회의 발표과제 세부계획 】

□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

- 생·손보협회 자율규제 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('24년말)

□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

-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('25년上)
-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('25년上)

【향후과제 추진방향】

□ 이사회·경영진 간 상호견제 강화

-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 인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사회 역할 강화 및 독립성 제고방안 등 지배구조 개선

□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

- 단기성과주의 중심의 경영·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진 성과·보상체계 개선방안 검토

□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

- 책무구조도 도입의무 등 지배구조법 개정사항 및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